

시민이 행복한 정의로운 서울 구현

# 주요 업무 보고

2021. 3.

민생사법경찰단

# I. 일반 현황

## 1 조직 근거·연혁

### □ 법적 근거

- 「형사소송법」 제245조의10(특별사법경찰관리)
  -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의 범위는 법률로써 정함
- 「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」(사법경찰직무법)
  - 소속 관서의 장의 제청에 의하여 관할 지방검찰청검사장이 지명(제5조)
  - 소속 관서 관할구역에서 발생하는 지명 직무에 대한 범죄 수사(제6조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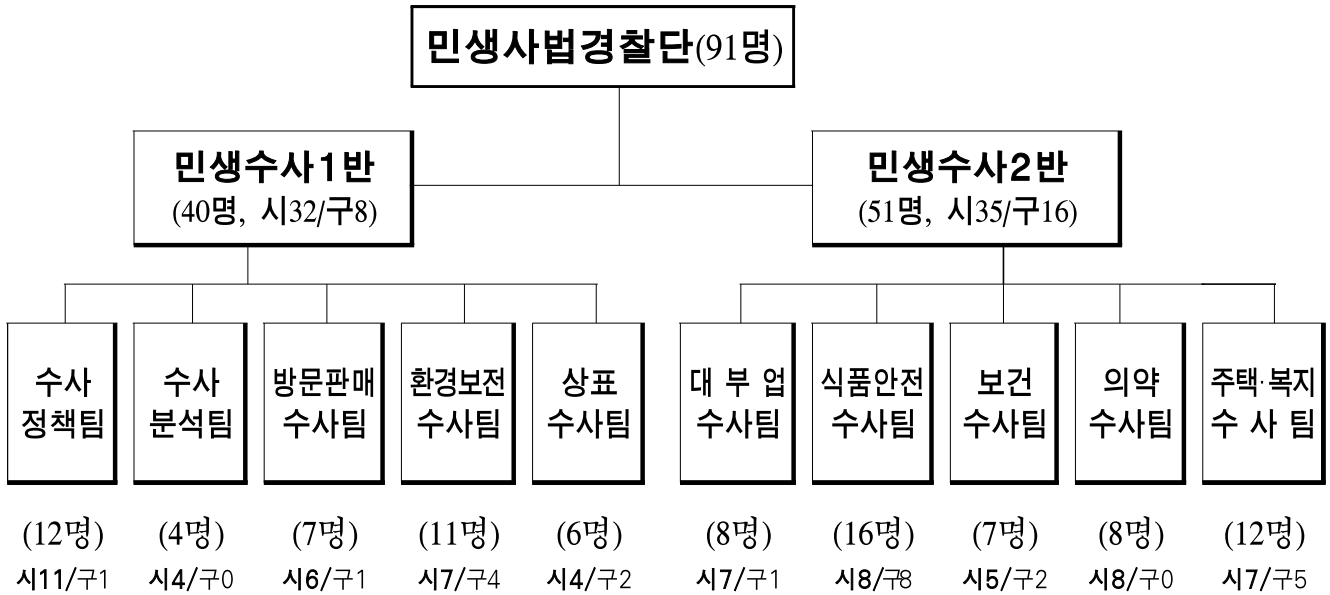
### □ 설치 연혁

- ▶ '08.01.01 : 지자체 최초 수사전담 조직 창설(1과 2팀, 25개 지원반)
  - ※ 특별사법경찰지원과, 82명(시10, 구72)
- ▶ '08.02.21 : 5개 분야 지명(식품/공중위생/의약/환경/원산지표시)
- ▶ '08.03.20 : 법률자문검사 파견(부장검사, 법무부에서 파견)
- ▶ '08.05.27 : 1개 분야 지명(청소년)
- ▶ '10.11.22 : 1개 분야 지명(개발제한구역)
- ▶ '12.04.18 : 1개 분야 지명(상표)
- ▶ '15.08.26 : 4개 분야 지명(대부업·다단계판매/석유·자동차관리/화장품/의료기기)
- ▶ '15.11.12 : '민생사법경찰단' 신설(행정국 내 1단·2반·8팀)
- ▶ '16.02.04 : 1부시장 직속 '복수직급(3·4급) 조직으로 독립(1단·2반·8팀)
- ▶ '18.01.18 : 4개 분야 지명(의료 및 정신건강시설/사회복지시설/시설물안전/부동산)
- ▶ '18.01.18 : 부동산수사팀(TF) 신설(1단·2반·8팀·1TF)
- ▶ '20.01.10 : 디지털수사팀 신설(1단·2반·9팀·1TF ⇒ '21.1.13. '수사분석팀' 변경)
- ▶ '20.07.10 : 주택·복지수사팀 신설(1단·2반·9팀)
- ▶ '21.01.13 : 보건수사팀, 의약수사팀 신설(기존 '보건의약수사팀' 분리, 1단·2반·10팀)

## 2

## 조직 · 인력 · 예산 현황 ('21.2월 현재)

□ 조직 : 1단 2반 10팀



□ 인력 : 91명 (시 67명, 자치구 24명)

< 서울시 >

(단위 : 명)

구분	계	행정 직 군						기술 직 군				임기제
		소계	3급	4급	5급	6급	7급 이하	소계	5급	6급	7급 이하	6급
정 원	69	37	1	2	8	14	12	31	9	17	5	1
현 원	67	34	-	3	6	14	11	32	5	19	8	1
과부족	△2	△3	△1	+1	△2	-	△1	+1	△4	+2	+3	-

< 자치구 >

(단위 : 명)

구분	계	행정 직 군				기술 직 군				비고
		소계	6급	7급	8급	소계	6급	7급	8급	
현 원	24	22	13	7	2	2	0	2	0	

□ 2021년 예산 : 1,248,207천원

(단위 : 천원)

정책/단위/세부사업별	2020 예산		2021 예산	최종예산 대비	
	당초	최종		증 감	비율 (%)
<b>총 계</b>	1,555,785	1,540,785	1,248,207	△292,578	△19.0
민생사법경찰 활동강화를 통한 안전도시 서울	1,415,399	1,400,399	1,102,945	△297,454	△21.2
민생사법경찰 업무활성화	1,415,399	1,400,399	1,102,945	△297,454	△21.2
특별사법경찰 직무역량강화	61,805	46,805	42,285	△4,520	△9.7
특별사법경찰 활동 활성화 지원	1,165,323	1,165,323	896,877	△268,446	△23.0
특별사법경찰 수사 전산 시스템 구축 및 운영	188,271	188,271	163,783	△24,488	△13.0
행정운영경비	140,386	140,386	145,262	4,876	3.5
기본경비	140,386	140,386	145,262	4,876	3.5
기본경비	140,386	140,386	145,262	4,876	3.5

### 3

## 업무분야 및 직무 범위

### □ 수사팀별 업무분야

반 명	팀 명	담 당 업 무
민생수사 1 반	수 사 정 책 팀	▶ 인사, 조직, 예산, 직무교육, 송치 등 특사경 업무총괄 - 단속·수사 종합계획 수립, 홍보, 제도 개선, 사건 송치 등
	수 사 분 석 팀	▶ 디지털수사 지원 및 각종 수사정보시스템 운영 - 디지털포렌식 수사지원, 수사정보포털시스템 등 운영
	방문판매 수 사 팀	▶ 불법 방문·다단계판매 및 할부거래 분야 - 불법 다단계판매, 선불식 할부거래업(상조)
	환경보전 수 사 팀	▶ 환경 분야 - 대기·수질·폐기물 등 환경오염물질 무단배출 행위 수사, 가짜 석유제품 불법유통 수사 등 ▶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분야
	상 표 수 사 팀	▶ 상표권 침해 분야 - 상표·상호 도용,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 수사 등
민생수사 2 반	대 부 업 수 사 팀	▶ 불법 대부업 분야 - 불법 대부업 분야 기획·인지 수사 등
	식품안전 수 사 팀	▶ 식품 원산지표시 분야 - 식품 제조·가공·유통과정 위반, 농수축산물 원산지 위반 - 수입식품안전관리 및 식품분야 시험·검사 등에 관한 위반행위 수사
	보 건 수 사 팀	▶ 공중위생·의료·정신 분야 수사 - 위생업소 불법 행위, 무면허 의료 행위, 의료관련 개인정보 누설 행위, 정신건강시설 이용자 보호 관련 수사 등
	의 약 수 사 팀	▶ 의약·화장품·의료기기 분야 - 불법의약품·화장품·의료기기 제조·판매 사범 등
	주택·복지 수 사 팀	▶ 부동산 불법행위 분야 - 주택법, 공인중개사법,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수사 ▶ 사회복지시설 분야, 청소년보호 분야 - 사회복지사업법 위반행위(보조금 목적외 사용 등) 수사 - 청소년 유해 매체물 배포, 유해 약물 판매 등

□ 수사 직무 범위 : 16개 분야 / 71개 법률

지명분야	직무내용	직무관련 법률
대부업 및 방문판매	▶대부업·방문판매 등 이용자 보호 및 건전한 사업 육성	○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○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○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
환경	▶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및 맑은 환경 보전 (대기·수질·폐기물 등 환경보전위반행위 등)	○ 대기환경보전법, 물환경보전법 등 31개 법률 ○ 석면안전관리법 등 7개 법률
석유 및 자동차	▶시민의 안전과 환경오염을 위협하는 불법행위 근절 (가짜석유 유통, 무등록 석유판매, 무등록 불법정비 등)	○ 석유사업법, 자동차관리법 등 3개 법률
개발제한구역	▶그린벨트 내 불법행위 차단으로 건전생활공간 조성 (무허가 건축, 공작물 설치행위 등)	○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
시설물 안전	▶ 시설물의 안전점검 등을 통한 재해와 재난 예방 (3종 시설물 중 민간관리주체 소관 시설물 긴급안전 점검을 거부행위 등 <예>150세대이하 공동주택)	○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
상표	▶ 위조상품 제조·판매 근절로 상품신뢰도 제고 (상표·상호 도용 등 부정경쟁 및 상표권 침해 등)	○ 상표법 ○ 대외무역법 ○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
식품위생	▶ 부정식품 추방으로 시민건강 먹거리 안전 확보 (식품생산→제조→유통 등 위해여부, 위생관리 등) ▶ 수입식품안전관리 및 식품분야 시험·검사 등에 관한 위반행위 수사	○ 식품위생법 ○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○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○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(식품위생 범죄) ○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·지원에 관한 법률 ○ 축산물위생관리법 ○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○ 식품·의약품분야 시험·검사 등에 관한 법률
원산지표시	▶ 식품·농수산물, 공산품 등 먹거리에 대한 불신 해소 (농·수산물·공산품 원산지허위표시, 인삼·양곡 불법판매 등)	○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○ 인삼산업법 ○ 양곡관리법 ○ 대외무역법(원산지표시)
공중위생	▶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위생수준 제고 (공중위생업소 미신고 영업행위 및 위생상태 등)	○ 공중위생관리법
의료 및 정신시설	▶ 의료관련 개인정보 보호 ▶ 정신건강시설 이용자 보호	○ 의료법 ○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
의약품	▶ 가짜 의약품 등으로부터 시민건강 확보 (무자격자 고용 의약품 판매, 의약품 불법유통 등)	○ 약사법 ○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(약사 범죄)
화장품	▶ 안전한 화장품 보급을 통한 국민보건 향상 (가짜 무등록 제품 제조 및 판매행위 등)	○ 화장품법
의료기기	▶ 안전한 의료기기 보급을 통한 국민보건 향상 (가짜 무등록 제품 제조 및 판매행위 등)	○ 의료기기법
부동산	▶ 부동산 불법행위 수사를 통한 주거안정 도모 (분양권 불법전매, 청약통장 불법거래, 뺏다방 단속 등)	○ 주택법 ○ 공인중개사법 ○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
사회복지	▶ 사회복지법인, 사회복지시설 및 보조금 관련 수사	○ 사회복지사업법
청소년	▶ 청소년의 건전한 정서함양 및 탈선예방 (청소년유해매체물·약물, 유해업소출입·고용위반 등)	○ 청소년 보호법

4

2020년 수사실적 : 726건 / 796명 입건 (21.2.17. 현재)

구 분	입 건 (A+B+C+D)		수 사 중 (A)		검찰지휘 (B)		검찰송치 (C)		기타* (D)	
	건	명	건	명	건	명	건	명	건	명
합 계	726	796	42	47	16	19	664	726	4	4
방 판 및 다 단 계	12	19	-	-	-	-	12	19	-	-
환 경	81	117	2	5	4	7	75	105	-	-
석 유 및 자 동 차	38	41	-	-	-	-	38	41	-	-
개 발 제 한 구 역	12	12	1	1	2	2	9	9	-	-
상 표	59	59	1	1	2	2	56	56	-	-
대 부 업	14	17	-	-	-	-	14	17	-	-
식 품 위 생	338	344	10	11	5	5	320	325	3	3
원 산 지 표 시	12	12	5	5	2	2	5	5	-	-
의 약	20	23	10	11	-	-	10	12	-	-
의 료 및 정 신 시 설	2	2	1	1	-	-	1	1	-	-
공 중 위 생	57	61	1	1	1	1	55	59	-	-
화 장 품	-	-	-	-	-	-	-	-	-	-
의 료 기 기	26	28	11	11	-	-	15	17	-	-
부 동 산	47	50	-	-	-	-	46	49	1	1
사 회 복 지	6	9	-	-	-	-	6	9	-	-
청 소 년 보 호	2	2	-	-	-	-	2	2	-	-

\* 타관이첩 3, 반송 1

## II. 2021년 업무추진 방향

비전

**시민이 행복한 정의로운 서울 구현**

목표

**민생범죄 척결 및 사전예방 ⇒ 민생침해 Zero화**

전략 1

**코로나19로부터 시민 안전 및 생명 보호**

-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 신속 대응 체계 구축
- 코로나19 민생침해 및 생활·안전 범죄 역량 집중
- 특사경의 감염병예방법 수사권 확보 총력

전략 2

**시정 역점사업의 효율적 지원을 위한 수사력 집중**

-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불법 거래 집중 수사
- 민생침해 경제범죄 수사로 시민 피해 사전예방
- 환경·식품·보건 범죄 수사로 시민 건강 확보

전략 3

**온라인 정보분석 등을 통한 수사력 강화**

- 언택트·디지털 정보 분석을 통한 수사기법 고도화
- 수사관 동기부여·교육을 통한 수사관 역량 제고
- 수사절차 준수를 통한 피의자 인권보호 강화



# III. 주요사업 추진계획

## 1 코로나19로부터 시민 안전 및 생명 보호

- 1-1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 신속 대응 체계 구축
- 1-2 코로나19 민생침해 및 생활·안전 범죄 역량 집중
- 1-3 특사경의 감염병예방법 수사권 확보 총력

## 2 시정 역점사업의 효율적 지원을 위한 수사력 집중

- 2-1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불법 거래 집중 수사
- 2-2 민생침해 경제범죄 수사로 시민 피해 사전예방
- 2-3 환경·식품·보건 범죄 수사로 시민 건강 확보

## 3 온라인 정보분석 등을 통한 수사력 강화

- 3-1 언택트·디지털 정보 분석을 통한 수사기법 고도화
- 3-2 수사관 동기부여·교육을 통한 수사관 역량 제고
- 3-3 수사절차 준수를 통한 피의자 인권보호 강화

# 1

## 코로나19로부터 시민 안전 및 생명 보호

### 1-1

###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 신속 대응 체계 구축

- ◆ 민사단 내 방역수칙 위반 행위 중점 신속대응팀 구성 및 운영
- ◆ 응답소 민원에 대한 市·자치구 합동단속 등으로 단속효과 극대화 도모

#### □ 민사단 내 ‘방역수칙 위반 신속대응팀’ 운영 (’21.2월 ~ )

- 방향 : 응답소 신고 즉시 동시 대응, 언론보도 前 선제 대응
- 구성 : 총 6개팀 55명 (민원분석 총괄팀, 신속대응5팀)
- 홍보 : 위반업소 단속예보제 시행으로 예방효과 극대화
- 내용 : 방역 계도(안내문 배포) 및 불법행위 채증 등
  - ※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집합금지·제한 위반행위 중점
- 위반정도에 따라 행정처분(과태료, 영업정지 등) 의뢰, 수사, 고발 등 조치



#### □ 서울시·자치구 등 관련기관과 방역수칙 합동단속 추진

- 대상 : 긴급·선제적 예방 점검 필요 분야 ⇒ 市 정책부서 협의 후 추진
  - 다중이용시설의 방역수칙 위반 행위 중점 대응 추진
- 방법 : 가장 효율적이고 실효성 있는 점검방안 강구 ⇒ 단속효과 극대화
  - 市 정책부서와 협의하여 단속효과 극대화를 위한 수사기법 적용

◆ 2020년 성과 : 방역 위반 언론보도 등 사회적 이슈에 따른 긴급 점검 실시

- 내용 : 거리두기 2.5단계에 맞춰, 12.9~12.29 음식점 등 대상 방역수칙 계도 활동 전개
- 성과 : 민사단 단독, 시·자치구·경찰 합동단속 ⇒ 783개소 점검, 8개 업소 적발

작성 자

민생수사1반장 : 최한철 ☎ 2133-8805 수사정책팀장 : 강남태 ☎8810 담당 : 김효형 ☎8814

◆ 코로나19로 인해 확산되는 범죄 피해 예방 및 최소화를 위해 민생침해 및 시민 생활·안전 범죄 대응에 수사 역량 집중

□ **코로나19로 급증이 예측되는 범죄 집중 수사**

- 경제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**온라인 불법 대부 기획 수사**
  - 코로나19로 경기침체 ⇒ 불법 대부업 성행 ⇒ 서민 피해 대폭 증가 우려
  - 금융감독원·자치구 협업을 통해 신고 정보 공유하여 의심업체 대상 수사
- 코로나19 여파로 폭증하는 **온라인 위조상품 유통 중점 수사**
  - 신고건수(특허청) : ('19.1~8월) 4,194건 ⇒ ('20.1~8월) 12,767건
- **'배달 앱', '도시락' 음식점 원산지 허위표시 등 부정식품 유통 수사**
  - 유통기한 경과 음식, 위생상태 불량, 무허가 부정 식품 등
- **격리자·확진자 치료과정에서 증가하는 의료폐기물 불법 처리행위 수사**
  - 병원, 생활치료센터 내 방호복·장갑 등 의료폐기물 당일 처리 준수 여부 등

□ **코로나19 수사 TF 분야 집중 수사** ※ '20.7월부터 지속

- 코로나19를 틈탄 **방역물품 불법 제조·유통·판매 행위 등 중점 수사**
  - 불량 마스크·손소독제·체온계, 코로나 치료 식품·의약품 허위 광고행위 등
- 무등록 다단계·무신고 방문판매 영업의 **불법 설명회 개최 등 방지 수사**



### 1-3

## 특사경의 감염병예방법 수사권 확보 총력

- ◆ 방역수칙 위반에 대한 신속한 단속·수사를 위해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으로 특사경의 감염병예방법 위반 범죄에 대한 수사권 확보 총력 대응

### □ 특사경 감염병예방법 수사권 확보 필요성

#### ○ 감염병예방법 특사경 수사권 극히 제한적

－ 특사경으로 지명된 ① 방역관 ② 역학조사관 한해 수사권 부여 ※ 현재 市 2명

#### ○ 현재 민사단은 방역 계도만 가능, 감염병예방법 범죄 단속·수사 불가

－ 단속은 행정기관(市·자치구 관련부서), 수사는 일반경찰이 각자 수행

〈 특사경 감염병예방법 수사권 필요 사례 〉

- ▶ '20.12.17. 집합금지 대상 유흥시설(노래방) 영업 등 확인에도 단속·수사권 미비로, 경찰·자치구 협조로 12.18. 적발(4개업소)



### □ 특사경 감염병예방법 수사권 확보를 위한 특단의 노력 경주

#### ○ 추진경과 : 법무부 건의('20.8.11) ⇒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\* 중 ('20.9.7~)

\* 검토보고서 ('20.11월) : '특사경을 실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타당한 입법조치'

#### ○ 주요내용 : 감염병예방법 위반 수사 특사경 지명 범위 및 수사권 확대

－ (현행) 방역관과 역학조사관 ⇒ (확대) “조사·단속 등에 종사하는 공무원”

－ (현행) 감염병예방법 위반 일부 범죄 ⇒ (확대) 감염병예방법 위반 범죄 전부

#### ○ 확보 노력('21.1월) : 중앙부처·국회· 시도지사협의회 법 개정 건의

－ 보건복지부, 국회(법제사법위원회·보건복지위원회), 시도 대정부 정책건의 과제 등

#### ○ 향후계획 : 타 시도 특사경과 지속 협업, 상반기 중 국회 통과 추진

－ 국회·법무부 등 유관기관 방문·자료 제출 등으로 신속한 법률 개정 협조 요청

## 2

## 시장 역점사업의 효율적 지원을 위한 수사력 집중

### 2-1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불법 거래 집중 수사

- ◆ 집값담합, 청약통장 불법거래 등 중점 수사로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기여하고, 사회복지시설 보조금 불법집행 수사로 투명성 제고

#### □ 주택가격 왜곡 집값담합 행위 중점 수사

- 공인중개사의 중개대상물에 대한 정당한 표시·광고 행위를 방해한 자
  - 공인중개사에게 시세 보다 현저히 높은 가격으로 중개대상물 표시 강요 등
- 입주민 등이 특정가격 이하로 중개의뢰하지 않도록 유도하는 행위 등

〈 집값담합 행위 수사 방법 : 유관기관 협업 추진 〉

- ▶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·한국부동산원 등과 정보공유를 통한 수사대상 발굴



#### □ 청약 과열 아파트 선별 공급질서 교란 등 수사

- 청약통장 불법거래, 위장 전입·결혼 등 부정청약 행위 중점
  - 시세 차익을 노린 투기세력의 주택 공급 교란행위 엄단
- 국토교통부(주택기금과)·한국부동산원 합동 점검·수사



⇒ '서울시-국토부, 집값 담합·부정청약...부동산질서 교란 행위 공조수사' ('21.2.18. 보도자료)

#### □ 사회복지시설·법인 보조금 불법집행 중점수사

- 최근 복지 보조금 부정수급 관련 신고 민원 증가 추세 대응 필요
- 어린이집 보조금 부정수급 등 기획수사를 통한 보육환경 개선
  - 보육교사 허위 채용 후, 인건비를 되돌려 받는 페이백(Payback) 등
- 사회복지법인 기본재산 무허가 처분, 보조금 불법사용 등 수사

작성 자

민생수사2반장 : 박병현 ☎ 2133-8807 주택·복지수사팀장 : 한창욱 ☎8894 담당 : 최성욱 ☎8971  
담당 : 김진영 ☎8891

## 2-2

# 민생침해 경제범죄 수사로 시민 피해 사전예방

- ◆ **가상화폐** 투자를 악용한 **다단계** 범죄, **오프라인 위조상품** 유통행위, **불법 대부업** 근절을 위한 민관 합동 TF 수사로 시민 피해 방지

### 사행성·투기성 금전거래 **불법 다단계**업체 수사

- **가상화폐** 투자 사칭 불법 다단계 수사

- 인터넷, SNS를 통해 퍼지는 '투자' 정보 상시 모니터링
- 불법다단계 포털 카페 등을 통해 피해사례 분석·활용



- 선불식 할부거래업 수사 : 다단계 방식 상조회원 모집 행위 등

### **오프라인 위조상품** 유통·판매 수사 강화

- 범죄 취약시간대인 야간 **오프라인 위조상품** 수사

- 동대문·남대문 등 영업시간(21~9시) 등 고려하여 수사
- 단속 활동 전개 (\* 경찰청·관세청·자치구 등 유관기관 협업)



- 생활용품(주방·욕실용품, 의류 등) **원산지 표시위반** 행위 집중 수사

### 민·관 합동 TF 운영으로 **불법 대부업** 근절 도모

- 중점수사 : 무등록 대부영업 및 광고, 고금리 이자편취, 명의대여 등
- TF 운영 : 불법대부업체 민관 합동점검 및 분기별 간담회 개최

민생사법경찰단

(불법 대부 수사)

응답소및  
눈물그만상담센터

(피해신고·상담)

서울시·자치구  
(공정경제담당관 등)

(업체 점검·단속)

금융감독원

(피해상담·수사의뢰)

한국대부  
금융협회

(모니터링·수사의뢰)

#### 작성 자

민생수사1반장 : 최한철 ☎ 2133-8805 방문판매수사팀장 : 이준영 ☎ 8930 담당 : 이범일 ☎ 8938

민생수사1반장 : 최한철 ☎ 2133-8805 상포수사팀장 : 이은웅 ☎ 8910 담당 : 유재영 ☎ 8913

민생수사2반장 : 박병현 ☎ 2133-8807 대부업수사팀장 : 김종운 ☎ 8890 담당 : 권유안 ☎ 8955

## 2-3

# 환경 · 식품 · 보건 범죄 수사로 시민 건강 확보

- ◆ **사무장병원** 및 불법의약품 판매, **유해식품 해외직구 유통·판매** 수사,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집중수사 등을 통한 시민 건강 확보

### □ 무자격자 및 부실 진료 근절을 위한 **사무장병원** 수사

- 사무장병원 : 의사가 아닌 자가 명의 대여 등으로 의료기관 개설 행위
  - 수익만을 목적으로 영업 : 의료질서 훼손, 건강보험 재정누수 주요 원인
- 협업추진 : 市·자치구 보건부서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의심업체 정보 공유

### □ **불법 탈모센터** 및 **의약품** 판매 기획 수사

- 탈모센터 : 무신고 영업, 불법 의료기기 사용, 허위 광고 등
- 의 약 품 : 전문의약품(주사제 등) 의사 처방 없이 도매상 등 판매

### □ **유해식품 해외직구 유통·판매** 수사

- 인터넷상에서 이뤄지는 **유해식품 유통·판매** 행위
  - 가공·건강·신선 식품 등에 대한 안전성 검사 소홀 우려
  - 쇼핑 후기(부작용 호소 등) 제품 위주 분석 및 수사
- 협업추진 : 관세청, **식품의약품안전처** 등과 합동단속·정보공유 추진



### □ **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등 집중** 수사

- 미세먼지 발생 비율이 높은 **배출사업장** 중점
  - 도금업체·도장시설, 친환경 가정용 보일러 설치업체 등
  - 방지사설 미가동, 미인증 보일러 설치 행위 중점 수사
    - ▶ 기후환경본부 『2차년도 미세먼지 계절관리제』와 연계 추진



미세먼지 원인 (서울연구원, 2019)

※ **최근 도금업체 방지사설 미가동 행위 등 일제점검 : 24개 업체 적발**

작성 자	민생수사1반장 : 최한철 ☎ 2133-8805	환경보전수사팀장 : 유영애 ☎8870	담당 : 이주영 ☎8898
	민생수사2반장 : 박병현 ☎ 2133-8807	식품안전수사팀장 : 이철명 ☎8832	담당 : 노재규 ☎8848
	민생수사2반장 : 박병현 ☎ 2133-8807	보건수사팀장 : 한명숙 ☎8850	담당 : 홍기정 ☎8970
	민생수사2반장 : 박병현 ☎ 2133-8807	의약수사팀장 : 민규리 ☎8942	담당 : 김동철 ☎8858

### 3

## 온라인 정보분석 등을 통한 수사력 강화

### 3-1

## 언택트·디지털 정보 분석을 통한 수사기법 고도화

- ◆ 제보 위주의 적발 수사에서 '데이터 분석을 통한 **기획·예방 수사 강화**'
  - ▶ 정보분석 및 첨단기술 활용 ⇨ 수사력 효율적 배분 및 범죄 예방 홍보

### □ 정보수집 및 분석을 통한 기획·예방 수사

- 민생 이슈 사항에 대한 언론보도 내용과 소셜 및 응답소 데이터 **수집**
  - ⇨ 데이터간 **융합**과 **시각화**를 통한 인사이트 도출 ⇨ **수사방향** 선정



### ★ 매월 이슈별 동향보고서 작성 및 수사팀 공유

- 수사영역별 우선순위와 파급력 감안 수사력 배분 ⇒ **선택과 집중**
- 시기별·업종별 시의성 있는 예방적 기획수사 확대 ⇒ **시민체감도 향상**

### □ 데이터 분석 SW·정보검색 노하우 활용 과학적 수사활동 전개

1단계  
(교육)

【내·외부 교육 과정 적극 활용】  
⇒ 수사관 자체적인 데이터 활용 능력 배양



2단계  
(협업)

【수사분석팀·외부 전문가 참여】  
⇒ 고난이도 또는 대량의 데이터 분석 필요시



작성 자 민생수사1반장 : 최한철 ☎ 2133-8805 수사분석팀장 : 마경근 ☎ 8816 담당 : 박완용 ☎ 8917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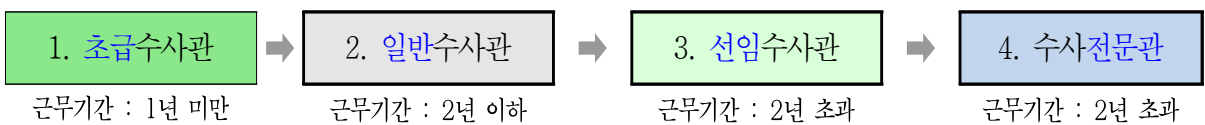
## 3-2 수사관 동기부여·교육을 통한 수사관 역량 제고

- ◆ 수사관 **맞춤형 동기부여** 프로그램 도입·운영 및 **수사직무 교육** 등을 통해, 민사단 조직과 수사관의 전문성 및 수사역량 제고

### □ 수사관 **동기부여** 프로그램 도입으로 수사관 역량 제고 도모

- 수사관별 **맞춤형 성장 플랜** 수립 및 시행 : 수사관 달성 목표 설정

– 근무기간·수사역량 등을 감안하여 수사관 직위 세분화



– 직위별 수사관이 달성 가능한 **지표별 목표 제시**

- ▶ ①수사교육 ②정보활동 ③내사활동 ④기획수사 ⑤협업 등 5개 지표 마련

- 우수 수사관 **우대 조치** 등 시행 : 성장 플랜에 의한 인센티브 제공

– 우수 수사관 : 장기근무 유도, 근평·표창·특별승급·성과급 등 우대

– 전체 수사관 : 전문교육·멘토링 교육 제공 등을 통한 동기 부여

⇒ 성장 플랜 등 상세내용은 '민생사법경찰단 업무편람(21.1.1 시행)' 반영 조치

### □ **맞춤형·체계적 교육 실시** 등을 통한 수사 전문인력 양성

- 정기적인 수사사례 및 직무분석 발표 등을 통한 수사역량 강화

- 수사실무 및 현장교육, 1:1 멘토링제 등 (코로나19 감안, 온라인 교육 병행)

– 직무교육 : 수사기록 작성, 전문가 초빙교육 및 외부기관 교육 이수 등

– 현장교육 : 멘토링제 활용한 피의자신문, 압수수색, 잠복 및 추적 등

- (가칭) 「전문수사지문단체」 운영 : 민사단 퇴직 수사관, 외부 전문가 활용

– 퇴직 수사관 : 인지부터 송치까지 수사기법 및 절차 등 실무 노하우 전수

– 외부 전문가 : 최신 범죄동향, 신규 수사 가능분야 및 제도개선 사항 발굴 등

작성 자

민생수사1반장 : 최한철 ☎ 2133-8805 수사정책팀장 : 강남태 ☎8810 담당 : 안재동 ☎8811

담당 : 김효형 ☎8814

### 3-3


## 수사절차 준수를 통한 피의자 인권보호 강화

- ◆ 인권보호 제도·환경 구축 및 수사관 인권의식 함양 ⇒ 피의자 인권보호
  - ▶ 수사절차 준수로 100건 실적보다 '1명의 인권'을 더 소중히 하는 자세 확립

### □ 인권보호 제도기반 구축·강화 : 인권 중심 특별사법경찰상 정립

- 헌법상 강제처분인 '영장 신청 사전심사제' 운영 내실화
  - 심사목적 : 강제처분인 영장 신청·집행 사전 검토로 불필요한 영장 자제
  - 심사대상 : 체포영장, 구속영장, 압수수색 영장, 통신영장 등 모든 영장
- 피의자 인권 존중을 위한 '민생사법경찰단 인권보호수사준칙' 준수
  - 피의자 출석요구 최소화 : 전화·이메일 등 구술·서면조사 최대한 활용
  - 조사시 피의자 권리 보장 : 21~6시 '심야조사', 12시간 초과 조사 제한
  - 부당한 수사 장기화 금지 및 압수·수색시 변호인 등 참여기회 충분한 보장

### □ 조사실 영상녹화 활성화 및 인권친화 수사 환경 조성

- 조사 전 영상녹화 안내 → 피의자 요청시 실시 
- 피의자 권리 인쇄 메모지 : 메모권 및 휴식시간 보장
- 조사실 환경 개선 : 노약자 등을 위한 휠체어·돋보기 비치



### □ 수사관 인권의식 함양 : 수사 전 과정에 '인권 최우선 가치화'

- 매뉴얼에 따른 수사 및 정기적인 인권교육 실시
  - 구체적 사례 중심의 지방자치단체 최초 인권수사 매뉴얼
  - 국가인권위원회와 협업, 수사관 인권교육 시행 : 반기 1회



붙임

# 2020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서

(행정자치위원회)

민생사법경찰단

## □ 총괄

- 수감결과 처리요구사항 등 ----- 총 10 건
- 조치내역

구	분	계	완 료	추진 중	검토 중	미반영
계	계	10	7	3	-	-
	시정· 처리요구사항	7	4	3	-	-
	건의 사항	3	3	-	-	-
	기타(자료제출 등)	-	-	-	-	-

# 시정 · 처리 요구사항

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	조치결과 및 향후추진계획
<p>○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수사 실적이 저조함. 촛불혁명을 계기로 공정에 대한 시민의 관심이 높은 상황임. 계곡 불법점유 등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를 근절할 수 있도록 서울시 유관부서와 협업하여 적극 수사하기 바람.</p>	<p><input type="checkbox"/> <b>추진상황 : 추진 중</b></p> <p><input type="checkbox"/> <b>추진내용</b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'20년 개발제한구역 관련 범죄 12건 송치 완료</li> <li>- 위반내용 : 개발제한구역 내 무단 증축, 형질 변경 등</li> <li>○ 공작물 설치 등 5건 관할구청 행정처분 통보</li> <li>○ 여름철 계곡 주변 불법행위 특별단속 실시('20.7.~8.)</li> <li>※ 보도자료 : 서울시, 여름철 계곡·유원지 주변 불법행위 특별단속 ('20. 7. 21.)</li> </ul> <p><input type="checkbox"/> <b>향후계획</b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유관부서와 협업체계를 구축, 위법행위 적극 수사 예정</li> <li>- 정보활동 및 자료 수집 ⇨ 적발시 수사개시 및 자치구 통보</li> <li>- 시 공원녹지정책과·자치구 특별점검 시 합동단속(연4회)</li> </ul>
<p>○ 디지털 증거의 유출은 개인정보의 유출과 직결되므로 디지털 증거 폐기에 대해 자세히 규정해야 함에도 「서울특별시 민생사법경찰단 디지털 증거의 수집·분석 및 관리 지침」은 담당수사관이 폐기를 요청하면 폐기해야 한다고 간단히 규정하고 있으므로 디지털 증거 폐기와 관련하여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절차를 마련하기 위한 규정의 개정이 필요함. 「서울특별시 민생사법경찰단 디지털 증거의 수집·분석 및 관리 지침」이 2017년 제정 이후 개정이 없는데 디지털 증거의 수집·분석에 관하여 주의해야 할 부분들이 많아지고 있으므로 이를 반영하여 개정하고 그 내용을 의회에 보고하시길 바람.</p>	<p><input type="checkbox"/> <b>추진상황 : 추진완료</b></p> <p><input type="checkbox"/> <b>추진내용</b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「서울특별시 민생사법경찰단 디지털 증거의 수집·분석 및 관리 지침」 개정 완료(20.12.18. 시행 '21.1.1.)</li> <li>○ 주요 개정내용</li> <li>- 디지털증거관리 담당자 지정 및 보관 기록 관리</li> <li>- 디지털증거 폐기 대상, 절차, 점검 등</li> <li>○ 기대효과</li> <li>- 디지털 증거 수집 과정상 발생할 수 있는 인권침해 사전 예방</li> <li>- 개인정보 유출 방지 및 보안 강화</li> </ul> <p><input type="checkbox"/> <b>향후계획</b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개정 지침 시행 : '21.1.1.~</li> </ul>

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	조치결과 및 향후추진계획
<p>○ 20년 민사단에서 운영하기로 한 '인권정책자문단'이 법적 근거가 필요함. 비록 코로나19로 구성·운영을 하지 못했다고 할지라도 인권정책 자문단 구성·운영을 위한 조례상 근거 마련을 검토해보기 바람.</p>	<p><input type="checkbox"/> 추진상황 : 추진완료</p> <p><input type="checkbox"/> 추진내용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민사단 정책자문단 구성·운영('19.11.~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목적 : 사건관계인 인권 보호 및 최신 특사경 범죄동향 파악</li> <li>- 구성 : 수사·인권·특사경 관련 전문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자 중 9명 내외 구성</li> <li>- 성격 : T/F형 자문단으로 운영</li> </ul> </li> <li>○ 조례상 근거 마련 검토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서울시 위원회 설치·운영 지침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T/F형 자문단 운영 후 운영실적 검토 ⇨ 조례 제정 여부 결정</li> </ul> </li> </ul> </li> </ul> <p><input type="checkbox"/> 향후계획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'21년 정책자문단 운영 이후 조례 제정 여부 결정</li> </ul>
<p>○ 민사단 내에 코로나19 수사 TF가 구성·운영 되는 것으로 알고 있음. 다단계·방문판매 업체 등을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되고 있는데, 이에 대해 적극 수사할 수 있도록 지원 바람.</p>	<p><input type="checkbox"/> 추진상황 : 추진완료</p> <p><input type="checkbox"/> 추진내용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운영기간 : '20. 7. 24. ~</li> <li>○ 수사대상 : 코로나19 관련 무등록 다단계 영업행위 등</li> <li>○ 추진실적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정보수집 : 41건 분석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민원접수 8건, 부서공유 18건, 자체정보 활동 15건</li> </ul> </li> <li>- 형사입건 : 5건, 12명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범죄혐의 : 방문·후원방문판매 신고 후 무등록 다단계영업 등</li> </ul> </li> </ul> </li> <li>○ 수사발표 : '20.11.4.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내용 : 코로나19 집단감염 진원지 불법 다단계업체 5개소 적발</li> </ul> </li> </ul> <p><input type="checkbox"/> 향후계획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코로나19 TF 지속 운영 및 방문판매법 위반행위 적극 수사</li> </ul>

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	조치결과 및 향후추진계획
<p>○ AI수사관 도입 후 별다른 성과를 보이지 못하고 있어 필요성에 대해 의구심이 들며, AI수사관을 유지시 수사시스템 기능 개선을 통해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길 바람.</p>	<p><input type="checkbox"/> 추진상황 : 추진완료</p> <p><input type="checkbox"/> 추진내용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수사정보분석시스템(AI수사관) 도입 : '19. 7.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※ 수사정보분석시스템 : 머신러닝 기법을 활용, 온라인에서 수사단서를 수집하는 시스템(빅데이터담당관에서 '18년 구축 후 이관)</li> </ul> </li> <li>○ 활용실적 : 불법 방문판매 수사에 일부 활용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수사관 노하우를 시스템 알고리즘에 학습시키는 노력에 비해 산출결과가 미비하여 활용 저조</li> </ul> </li> <li>○ 정보수집 및 활용도 제고 방안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민생 이슈 언론보도, 소셜데이터 및 응답소 민원 데이터를 융합하여 수사방향 설정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각 수사팀과 협업, 매월 이슈별 동향보고서 작성</li> <li>· 시기별·업종별 시의성 있는 예방적 기획수사 확대</li> </ul> </li> <li>※ 기존 수사정보분석시스템은 키워드 검색 및 데이터 추출용으로 활용</li> </ul> </li> </ul> <p><input type="checkbox"/> 향후계획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매월 이슈별 동향보고서 작성 및 배포 : '21. 2.~</li> </ul>
<p>○ 20년 1월1일에 생긴 디지털 수사팀 소속 수사관들이 전문성이 부족하며, 전문성을 보완하기 위해 관련분야 교육 및 자격증 취득을 할 수 있도록 방안 마련과 노력을 하길 바람.</p>	<p><input type="checkbox"/> 추진상황 : 추진 중</p> <p><input type="checkbox"/> 추진내용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수사분석팀 신설 : 기존 디지털수사팀 개편('21.1. 조직개편)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목적 : 디지털수사에 한정하지 않고 전체수사 분석기능 강화</li> <li>- 구성 : 4명(팀장 1명, 팀원 3명)</li> <li>- 대검 디지털포렌식 교육 이수 및 자격증 취득자 1명</li> <li>※ 나머지 3명은 모두 전산직으로 관련 분야 경험이 충분하며 순차적으로 포렌식 관련 교육 이수 예정</li> </ul> </li> <li>○ '21년 디지털포렌식 등 전문분야 교육 신청 및 개설 요청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대검 디지털 포렌식 전문가 양성과정 신청('21.1.)</li> <li>- 국립과학수사연구원 '미디어포렌식 과정' 참여의사 통보 및 '디지털 증거물 수사 교육'과정 신설요청('21.1.)</li> </ul> </li> </ul> <p><input type="checkbox"/> 향후계획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'21년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시 전문교육 이수, 관련 자격증 취득 및 각종 연구소·학회 등 관련 학술대회 참여 예정</li> </ul>

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	조치결과 및 향후추진계획
<p>○ 민생사법경찰단 수사관의 1년 미만 재직자가 24명에 이르는 등 다른 부서에 비해서 재직기간이 비교적 짧으며, 직원들의 부서 이탈 방지를 위한 수사관 장기 근무 대책 마련이 필요함.</p>	<p><input type="checkbox"/> 추진상황 : 추진 중</p> <p><input type="checkbox"/> 추진내용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우수 수사관 장기근무 여건 조성('20.12.17.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반기별 1회씩 직무평가를 실시, 우수 수사관 우대 실시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근무성적평정 및 성과급에 반영, 특별승급 추천시 우대</li> <li>· 민사단 우수 수사관 선정, 대내·외 표창 대상자 선정시 우대</li> <li>· 우수한 실적을 거두고 2년 이상 근무 수사관은 전문관 추천</li> </ul> </li> </ul> </li> <li>○ 안정적인 수사관 양성 기반 구축을 위해 시 정원 증원 (68명 ⇨ 69명)</li> </ul> <p><input type="checkbox"/> 향후계획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우수 수사관 장기근무 우대방안 시행 : '21.1.~</li> </ul>

# 건의사항

건의사항	조치결과
<p>○ '18~'19년 목표를 초과 달성한 성과지표인 '디지털 수사 지원 횡수'에 대한 '21년 성과지표 재설정할 필요가 있음. '횡수'라는 정량적인 지표 보다는 디지털 수사 지원을 설명할 수 있는 지표 개발을 검토해보기 바람.</p>	<p><input type="checkbox"/> <b>추진상황 : 추진완료</b></p> <p><input type="checkbox"/> <b>추진내용</b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신규 지표 개발 : 디지털 포렌식 지원율(정량지표)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목적 : 객관적인 증거물 확보 등 과학수사 횡수 향상 유도</li> <li>- 내용 : 디지털포렌식 지원횡수 / 압수수색영장집행 횡수</li> </ul> </li> <li>○ 정성지표 개발 불가 사유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정성지표는 속성이나 품질을 파악하는 지표(만족도, 전문가 평가)</li> <li>- 만족도 조사 대상은 내부 수사관 또는 피의자로 조사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없으며, 전문가 평가도 피의자 정보 유출 우려로 실시 불가</li> </ul> </li> </ul> <p><input type="checkbox"/> <b>향후계획</b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과년도 수사자료 분석 등을 통해 수사지원 성과지표 개발 개발</li> </ul>
<p>○ 사전예보, 빅데이터 등의 활용을 통해 범죄예방강화에 주력해주시기 바람.</p>	<p><input type="checkbox"/> <b>추진상황 : 추진완료</b></p> <p><input type="checkbox"/> <b>추진내용</b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민생침해사전예보제 시행('20.2.~)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목적 : 서민 범죄피해 예방을 위해 수사 개시 전 보도자료 배포</li> <li>- 실적 : 해외직구 다이어트 제품 섯가루 검출 보도자료 배포('20.7.) 등 4건</li> </ul> </li> <li>○ 응답소 민원분석 데이터 활용('20.12.~)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목적 : 코로나19 단속을 위해 응답소 민원 데이터 분석 분석</li> <li>- 활용 : 시민 민원내용으로 점검대상 추출 ⇒ 점검 실시</li> <li>※ 활용사례 : 응답소 민원분석으로 단속대상을 선정, 민사단·경찰 합동 단속 실시 ⇒ 4개 업소 적발(35명 입건)</li> </ul> </li> <li>○ 수사관 과학수사 역량강화('20.10.~11.)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수사관 '인터넷 검색기법 실습교육' 실시(84명)</li> </ul> </li> </ul> <p><input type="checkbox"/> <b>향후계획</b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배달앱 부정식품, 부동산가격 담합, 사무장 병원 등 시기별 이슈를 고려한 사전 예보 실시 추진 : '21. 3.~</li> <li>○ 언론보도, 소셜데이터 수집 및 응답소 민원 데이터를 분석한 이슈별 동향보고서 작성 및 배포 : '21. 2.~</li> </ul>



건의사항	조치결과															
<p>○ 지역 소상공인과 관련된 원산지 표시 기준을 위반한 상표법 수사에 있어 중앙부처 및 자치구와 협조하여 수사실적을 제고하고 범죄 사전 예방에도 노력해주시기 바람.</p>	<p><input type="checkbox"/> <b>추진상황 : 추진완료</b></p> <p><input type="checkbox"/> <b>추진내용</b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협조체계 구축('20.11.13.~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서울세관 : 상품 수출입 정보 제공 등 협조체계 구축</li> <li>- 특 허 청 : 모니터링·추적·수사 노하우 전수 협업 실시</li> <li>- 주한EU대표부 : 상표권 침해 이슈를 주기적으로 논의</li> </ul> </li> <li>○ 최근 3년간 원산지 표시위반 수사 실적 <table border="1" data-bbox="571 728 1433 862"> <thead> <tr> <th>구 분</th> <th>계</th> <th>2020</th> <th>2019</th> <th>2018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입건(명)</td> <td>70</td> <td>2</td> <td>55</td> <td>13</td> </tr> <tr> <td>적발물품(점)</td> <td>89,972</td> <td>90</td> <td>83,855</td> <td>6,027</td> </tr> </tbody> </table> </li> <li>○ 범죄 사전예방 : 온라인 위조상품 거래 증가 관련 보도자료 배포  ※ 서울시, 짝퉁 판매 수사해 39억원 상당 적발, 95%가 온라인 거래(12.24.)</li> </ul> <p><input type="checkbox"/> <b>향후계획</b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코로나19 사태 진정 후 유관기관 합동단속 재개 등 적극 수사 예정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중기부, 산통부, 경찰청, 관세청 등 유관기관 협조체계 유지</li> </ul> </li> <li>○ 상표 관련 시민피해 확산이 우려될 시 범죄예방을 위한 보도자료 배포</li> </ul>	구 분	계	2020	2019	2018	입건(명)	70	2	55	13	적발물품(점)	89,972	90	83,855	6,027
구 분	계	2020	2019	2018												
입건(명)	70	2	55	13												
적발물품(점)	89,972	90	83,855	6,027												